기 고

저항과 시인

김 성 훈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지난 9월 조이 하조(Joy Harjo)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원주민 출신 최초 계관시인(Poet Laureate of the US)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배경은 조이 하조가 원주민과 소수민족의 주권 및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40여 년간 활발히 활동해온 데 있다. 하조는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크릭(Muskogee/Creek) 부족에서 태어나 억압과 차별, 가난을 겪으며 성장하다 1970년 뉴멕시코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뉴멕시코대학은 연방정부의 식민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원주민 인권 운동의 메카였다. 시인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최초의 원주민 저항 신문인 '콜럼버스 이전의 미국인들'(Americans Before Columbus)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첫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973년이었다.

한데 조이 하조의 행적은 우리의 김남주 시인을 떠올리게 한다. 김남주 시인은 유신 독재에 항거하여 오랜 옥고를 치렀고 자유, 민주, 인권, 정의에 관한 많은 시를 남겼다.

지난 5월 전남대학교에 개관한 김남주홀에 보관된 시들은 시인이 옥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시를 썼는지 잘 보여 준다. 흥미롭게도 김남주 시인은 조이 하조와 비슷한 시기인 1972년에 최초의 반유신 저항신문 '함성'을 발행했고,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성별, 인종, 문화,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두 시인은 나란히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조이 하조와 김남주가 남긴 '저항'이 여전히 유효한 시대정신인가 조심스럽게 묻게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 및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인식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이 하조의 계관시인 선정은 미국 문학계만큼은 시인이 대표하는 원주민문학의 예술적 성취를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달라진 원주민의 정치적 위상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역사와 맥을 같이한 원주민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적 차별과 고립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주권은 연방정부가 1924년 시민권을 수여하고 각 부족의 자치를 인정한 이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각 부족의 자치권은 미합중국이라는 국가 권력에 종속된 상태로만 유효한 까닭에 원주민은 여전히 (반)식민지 상태인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억압, 인종차별적 정책과 규제들, 그리고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득세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김남주 시인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산은 어떠한가?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지난 40년간 일부 세력에 의해 꾸준히 폄훼, 왜곡, 비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경향은 5·18 특별법 제정과 역사적 재평가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이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더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근본적 인식의 변화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며, 이를 좁히는 일은 매우 지난(至難)한 일임을 절감케 하는 것이다. 1964년 미국의 인권법(Civil Rights Acts)을 통한 '표면적 인종 차별 금지'(tokenism)가 소수 인종에 대한 백인 주류 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가져오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분명 모순적인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항해야 한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은 보수·진보, 좌·우, 동·서, 과거·현재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가치가 아닌가? 시대가 모순될수록 이 사실은 더욱 명료해진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봄을 목전에 둔 2019년 겨울, 두 시인 김남주와 조이 하조가 남긴 유산을 되새기는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저항'은 현재진행형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계속 불릴 것이다.

의료칼럼

가만뒀다간 큰 병 얻는 위염

신 준 혁
수완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최근 위염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음식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이 앓는 경우가 많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가 답답한 느낌의 증상이 있다면 위염일 확률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될 만큼 흔한 질병이다. 하지만 위염이 발생과 완화를 반복할 경우에는 만성화돼서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다.

위염은 소화가 안 되고 상복부가 불편한 상태를 총칭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체했다'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모두 위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염에는 소화성 궤양, 좁은 의미의 위염과 같은 기질적 병변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비궤양성 소화 불량과 같은 기능성 위장 장애도 모두 포함한다. 원래 위염의 정의는 위 점막의 염증을 나타내는 병리학적 용어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자극 및 손상으로 나타나는 위 점막의 반응 형성을 뜻한다.

위염의 원인은 다양하다. 위염의 원인으로는 과식과 불결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 여러 약물에 의한 점막 자극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되는데 급성 위염은 세균,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염 이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증상으로는 복부 불쾌감, 소화 불량으로 시작되어 오심, 구토, 복통까지 일으키게 된다.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과 공통된 증상을 보이지만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지칭한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지속될 경우 위 점막이 장의 점막과 유사하게 변하는 장상피화생이 발생할 수 있다.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위염의 진단은 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내시경 검사는 위염과 함께 궤양 및 암까지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화 불량이나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위 내시경이 권장된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점막의 병변을 분류해 염증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한다.

위염은 완치가 힘든 질환이기에 생활 습관의 개선과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에 의한 위염이 아닌 경우 식습관의 관리만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 중 흡연, 과도한 음주, 진통 소염제의 장기 복용, 카페인 음료 섭취 등이 위장관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염이 있다면 피해야 한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증상이 심한 위염은 위산 억제제, 위장 점막 보호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는 임상 의사에 따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는데, 대규모 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가 주관적인 증상 호전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의학에서는 위염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진행한다. 위장 기능성을 증대시키고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침 치료와 염증을 완화시키는 한약 및 약침 치료를 통해 위염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여러 한의학 논문에서는 침과 한약 치료가 만성 위축성 위염, 위 조직의 이형성, 담즙의 역류나 위 점막의 발적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화가 안 된다면 생활 습관의 개선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위염 치료 효과가 클 것이다.

기 고

소프트웨어 교육, 로컬이 앞서가는 설레는 상상

이 현 희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닌 소프트웨어(SW)로 움직인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이 2012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한 말이다. 자동차의 발명 이후 인류가 굳게 믿어왔던 자동차의 작동 공식을 깨는 뜻밖의 발표였고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때라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이미 우리의 현실 구석구석에 소프트웨어가 깊숙이 들어왔으며,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증폭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소프트웨어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전반적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이 1994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에 적용한 이래 2009년 일본, 2014년 영국과 핀란드로 열풍이 이어지면서 증기 기관차가 세상을 바꿨던 19세기 1차 산업 혁명을 뒤집을 조용한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그 혁명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의무 교육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전남교육청은 2016년 100개 교를 시작으로 2017년 125개, 2018년 146개에 이어 올해는 162개로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희망학교 135개 교를 함께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영광, 나주, 순천, 목포 등 4개의 권역에 소프트웨어 체험 센터를 구축하여 초·중학생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W교육이 필수 교과가 되면서 전남 교원들의 관심과 열기도 갈수록 뜨겁다.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전남형의 SW 교육 모델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도 각별해서 현장에서 큰 힘이 난다. 교육 정보화 영역에서 오랜 시간을 일해 온 필자로서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전남은 지역적인 특성상 초중고등학교의 75%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섬 학교의 비중 또한 높아 초중고교를 합쳐 168개에 이른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4%가 도서개발촉진법상 섬의 정의에 따른 섬 학교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취약한데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질의 SW 교사를 찾는데 애로마저 큰 것이 전남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실이었다.

자칫 이런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전남의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컸다.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격차가 소득의 격차와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각하면 아찔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 국책 과제에 선정되었다. 국비 35억 원에 전라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전남교육청이 매칭해 총 71억 원을 들여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 상반기에 100여 명의 SW 전문 교육 강사를 육성한 덕분에 올 2학기부터 섬 지역 학교현장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 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남 소프트웨어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센터도 나주 산포초등학교 덕례분교장에 조성 중이어서 폐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내년부터는 도서 벽지를 찾아가는 이동형 소프트웨어 체험 버스를 도입해 섬 지역 교육 활성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 기대와 설렘이 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한 발 앞서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전남의 학생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한 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전남형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이유다.

社 說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유치 전략 마련을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혁신도시 시즌 2'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더니 어제 전주에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혁신도시 소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나 '시즌 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도권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내년 3월이면 밑그림이 담긴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 온 지역 발전 견인 효과로 볼 때 시즌 2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최대 489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충청권은 자신들의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광주시는 내년 3월 정부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전남도와 공동으로 희망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행인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각각 유치 경쟁에 나설 경우 전국 유일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상생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도가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그동안 민선7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과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준비는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 시·도 간 의견을 조율해 가야 할 것이다.

잡음 많은 광주 아파트 재개발 이대론 안 된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 조합·시공사 간 갈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 상표 무단 사용 등으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광주시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조합은 엊그제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정황 등이 있다며 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 측은 소장에서 "포스코건설 측 직원들이 조합총회 2일 전 현금 100만~230만 원 상당 또는 수십 만 원권의 정육상품권 등을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원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의 한 주택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 측은 "주택조합 측이 시공 계약 체결까지 상표나 건설사 이름을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양해 각서 내용을 어겼다"며 조합에 양해 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동구에서도 모 지역주택조합이 협의나 동의 없이 포스코건설의 상표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조합 운영 방식 때문이다.

문제는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데 있다. 민간 영역이라고 행정기관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자치단체는 최소한 조합 구성과 조합 자금 관리 등 조합의 운영 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맥쿼리와 광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되고, 취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 2006년 5월의 일이다.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을 28년간, 3-1구간을 30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이 펀드는 도로 이용자에게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원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펀드가 돈을 받아 가는 방법에 기가 찼다. 먼저 도로 개통 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하고, 실제 통행량이 그 85%에 미달하면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1996년 용역에서 추정된 통행량은 무려 5만여 대. 그러나 실제로는 3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2만여 대의 통행 수입을 시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관리·운영 업체를 설립한 뒤 자본금에 9.34%의 수익도 모자라 외부 차입금에는 10~20%의 금리를 보장해 주었다. 자본금은 물론 외부차입금까지 맥쿼리가 투자했는데, 점차 고금리 외부차입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금 규모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썼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주라는 대로 내주기만 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들어서는 맥쿼리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민선 6기에서는 돌연 협상에 응해 2016년 말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10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2017년 이후 재정 보전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구간에서의 맥쿼리 수익도 2018년 477억 원으로 급증했다. 덕분에 맥쿼리에 돈을 맡긴 국내·외 투자자들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배당받아 챙기고 있다. 지역민의 혈세로 맥쿼리와 그 투자자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감사원이 기업 법인세의 대납 등 변경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는 그제야 법인세만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함없이 소극적인 자세다. 맥쿼리 문제는 자본의 탐욕, 펀드사의 합법적인 '착취',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 관련 전문가의 부도덕성 등이 뒤섞인 총체적인 '참사'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광주시의 의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